보도 참고자료

국민 행복시대의 新에너지 정책, 큰걸음 내딛다.
- 시민사회, 산업계, 학계가 모여 에너지믹스 합의(안) 도출 -

□ 2035년 **원전비중은 22~29%의 범위**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며,

○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, **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**하고, LNG와 등유의 세금은 경감하는 등 **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**이 추진됨

□ 시민사회·산업계·학계 60여명이 참여한 "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"은 **지난 5개월간의 숙의**를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 합의하고, 그 결과를 발표

□ 김창섭 위원장(가천대 교수)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,

○ ①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, ②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, ③ 환경·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, ④ 에너지 안보 강화, 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**5대 중점과제를 확정**하고,

○ 이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철학의 기본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

5대 중점과제	주요 정책목표
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	'35년 전력수요의 15% 이상을 감축
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	'35년 발전량 15%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
환경·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	화력 발전소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의무화 ⇒ '35년 온실가스 20%이상 감축
에너지 안보 강화	'35년 자원 개발률 40%, 신재생 에너지 11%
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	'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

□ 김 위원장은 공급설비의 확충만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며, **전기와 非전기간 상대가격 차이**가 최근 **전력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**이라고 언급

○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노력없이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**에너지 가격체계 개편**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

○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非과세중인 **발전용 유연탄에는 과세**하고 전기의 대체재 성격인 **LNG와 등유에는 과세를 완화**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제안

○ 또한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,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등의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에너지 원간 **왜곡된 상대가격을 조정**해야 한다고 강조

○ 단, 상대가격 조정과정에서 에너지 **빈곤층이나 서민층**의 **부담을 완화**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권고

□ 다음으로 **중앙집중식 전력망 시스템**이 초래한 송전선로와 발전소 건설관련 갈등과 전력계통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**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구축**이 긴요하다고 제안

○ 발전설비를 계획한 후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**발전-송전 설비계획을 패키지化**하고, 발전사업자에게 **입지 가이드라인(송전맵)**을 제시하여 계통이 가능한 곳에만 발전소 건설을 유도

○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,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설비·집단에너지·신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% 수준에서 '35년 **15%까지 확대**

□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수준인 **11%와 40%를 유지**하고,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'15년부터 **에너지 바우처 제도**를 도입하기로 결정

□ 쟁점사항이었던 '35년의 원전비중은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매우 상이하여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으나, 에너지 산업의 위기상황에서 **전문가의 책임있는 결정**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,

○ 원전비중 관련 **사회적 갈등을 최소화**하자는 공감대에서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있었음에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**22~29%**라는 범위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

□ 이는 원전이 가진 높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강조하여 **41%**까지 비중을 확대하였던 1차 계획('08)보다 **하향 조정**된 수치로, 1차 계획 이후 변화된 **전력수요, 국민 수용성, 송전계통 여건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결과

□ 김 위원장은 "**시민사회, 원자력 업계, 산업계** 등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원전비중과 에너지 가격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전례없이 성공적인 에너지 갈등조정 사례"라며,

○ "이는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 **초안마련 단계**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각자가 새에너지 정책의 주인공이라는 **주인의식과 책임감**을 가졌기 때문"이라고 설명

□ 김 위원장은 이전의 에너지 계획들과 달리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가진 차별적인 특징으로

○ "첫째 **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** 확립한 점, 둘째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**수용성·안전성·환경성**을 균형있게 반영한 점, 셋째 실효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**가격과 세제에 대한 개편안**을 마련한 점" 등을 꼽았으며,

○ "기본계획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여 **에너지 시스템을 정상화**하고 **국민의 신뢰를 회복**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"는 바람을 피력

첨부 1.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활동실적

□ 사회적 갈등과제들이 표면화되면서, 정책 수립·추진 과정에서 **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** 도출이 매우 중요

□ 이에 **最終**단계에서 공청회 등 **형식적 청취**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**初期**부터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

○ 시민단체, 학계, 산업계 등 60여명 이해관계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, 5~10월까지 50回이상 회의를 거쳐 다양한 **정책이슈**를 밀도있게 논의

【 워킹그룹별 주요 논의주제 】

총괄 WG	▪ 수요/전력/원전/신재생 4개분과 WG 총괄조정, 에너지 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, 에너지믹스 검토
수요 WG	▪ **수요전망**, 수요관리後 **목표수요, 에너지 가격정책** 등
전력 WG	▪ **송전 제약요건 검토**, **분산형 전원 활성화** 대책, **온실가스 감축방안** 마련 등
원전 WG	▪ **원전 경제성 분석, 원전비중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, 안전 강화대책** 등 중장기 원전정책 논의
신재생 WG	▪ 중장기 **신재생 보급목표 설정,** 보급정책 개선 등

□ '13.8월에는 "**7대 중점과제"를 도출**하였고, 9월에는 4개 워킹그룹이 분과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,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

7대 과제

① **에너지 가격체계 개편** : 非전기 - 전기間 소비왜곡 해소
② **지속가능 전원믹스** : 경제성, 수용성, 환경, 계통여건 등을 종합 고려
③ **전원시스템 분산화** : 분산형 전원 활성화, 합리적 송전망 운영
④ **수요관리 강화** : 가격, 기술, 정책 등을 활용한 전향적 수요관리
⑤ **환경정책과의 조화모색** :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
⑥ **에너지산업의 투명성, 수용성 제고** : 산업생태계 개선, 적극적 갈등관리
⑦ **신성장 동력 창출** : 신재생, 스마트 그리드 등 신산업 활성화

첨부 2.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및 향후일정

가. 법적 근거

○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, 에너지법 제10조제1항

나. 계획기간 및 주기

○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·시행 ('08년 1차 기본계획 수립)

다. 수립 절차

○ 에너지위원회 → 녹색성장위원회 → 국무회의 3단계 심의

라. 관련 계획

○ 공급측 기본계획 : 전력, 가스, 신재생 에너지, 집단 에너지 등

○ 수요측 기본계획 : 에너지 이용합리화, 기술개발, 기후변화 대응 등

마. 성 격

○ 에너지 부문의 **모든 분야를 총망라**하며,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**체계적으로 연계**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종합계획

바. 향후 일정

○ 10월 중순 : **워킹그룹 권고안**에 대한 1차 공청회 개최

○ 10월~11월 : 경제단체·전문가·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별, 일반국민 의견수렴 절차진행

○ 11월 : **에기본 정부안** 발표, 2차 공청회 개최

○ 12월 : 에기본 정부 수정안 보고·확정(에너지위원회→녹색성장위원회→국무회의 심의·확정)

첨부 3. 1차 계획과의 비교

	제1차 계획	제2차 계획
계획기간	'08년~'30년	'13년~'35년
5대 중점과제 【정책목표】	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【자주개발율 3 → 40%】	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【전력수요 15%이상 감축】
	탈석유 사회로 전환 【석유의존도 43 → 33%】	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【발전량 15%이상 점유】
	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【에너지원단위 0.34 → 0.18】	환경보호, 안전강화 【발전부문 온실가스 20% 감축】
	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【에너지기술수준 (선진국대비) 60 → 100%】	에너지 안보 강화 【자원개발율 40%, 신재생 보급 11%】
	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【에너지 빈곤층 7 → 0%】	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【'15년부터 바우처제도 도입】
원전비중 (발전설비 비중)	41%	22~29%에서 결정
신재생보급 (총에너지)	11%	11%(목표 유지)
수립과정	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	민-관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
법 적 수립절차	에너지위원회 심의	에너지위원회 → 녹색성장위원회 → 국무회의 심의